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6. 12.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종보고함.

I. 특별위원회의 구성

1. 구성경위

- 2015년 4월 13일 김기대 의원 외 4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 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라 제출되 어. 2015년 4월 23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됨.
- 2015년 6월 22일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 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 특별위원회 위원 20명을 선 임함(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당 1명(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6명).
- 2015년 7월 9일 제261회 정례회 폐회 중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기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오봉수 위원과 새누리당 황준화 위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
- 제261회 정례회 폐회 중인 2015년 7월 30일과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인 2015년 9월 16일에 각각 서울시 지역발전과 관련한 부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음.
- 제26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5년 12월 7일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

관으로부터 공공기여금 관련 입법동향 및 쟁점사항,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현황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하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1일까지 6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함.

-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6년 6월 10일(제5차 회의) 마곡사업추진 단 박희수 단장으로부터 마곡 첨단 R&D단지 조성사업 개요와 도시재생본 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최경주 단장과 동북4구사업추진반 정거택 반장으로부터 각각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의 진행현황과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을 보고받고, 기획조정실의 김태균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지역발전본부 신설 및 조직개편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하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6년 6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21일까지 6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함.
- 제270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2016년 11월 9일 제6차 회의에서 도시 재생본부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으로부터 "신도시계획에 따른 현금 기부채 납금 사용범위/법령 개정 추진 현황, 신도시계획에 따른 대규모 부지별 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지역발전본부 천석현 본부장으로부터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마곡첨단R&D단지 조성, 수색역 일대 개발계획 수립"을, 기획조정실 김태균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지역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각각업무보고를 받음.

그 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서울시 지역간 균형발전과 생활권별 특성있는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을 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낙후지역 기반시설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이송처 국토교통부, 국회)을 특별위원회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음.

2. 특별위원회의 구성

○ 위원명단(20인)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비고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김 기 대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오봉수	
구기건강 	새누리당	황 준 환	
		강 성 언	
		김 동 율	
		김 영 한	
		김 종 욱	
	-1 H . l-1 7 - l	맹 진 영	
	더불어민주당 (11인)	박 양 숙	
		서 영 진	
		유 용	
위 원		이승로	
11 2		장 우 윤	
		조 규 영	
	국민의당 (1인)	최 판 술	
		박 중 화	
	المراجع	우 미 경	
	새누리당 (5인)	이복근	
	(J 년 <i>)</i>	이 상 묵	
		이석주	

○ 직원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 정 래	
"	전문위원	오 정 균	
"	행정사무관	임 승 락	
"	입법조사관	최정희	
	<i>"</i>	한 봉 수	
"	주무관	강천수	
"	"	김 진 욱	
"	"	강 택 기	
"	"	최은섭	
"	"	정희숙	
의사담당관	속기 및 녹취요원	2 명	

Ⅱ. 특별위원회 활동개황

1. 목적

- 25개 자치구간 특성화된 균형발전은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행정의 최우선 전략목표여야 함은 분명함.
- 하지만 과거 시정 차원에서 재정적 격차 해소, 뉴타운 사업, 교육 격차 해소 등 여러 유형의 노력이 있었지만 지역간 발전 격차는 오히려 더 악화일로에 놓인 실정임. 특히 최근 잠실역 일대 제2롯데월드,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와 코엑스 일대의 동남권 마이스 업무중심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인접 한강 이북 지역의 지역발전 격차 인식은 더 커져만 가고 있음.
- 다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과거 모습 그대로의 보존과 복원에 치중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소외를 강요하고 있음.
- 이에 지역 차원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유형을 검토하고, 이 를 확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행정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각 종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2. 기간

○ 당초 : 2015년 6월 22일 ~ 2015년 12월 21일 (6개월간)

○ 연장 : 2016년 12월 22일 ~ 2016년 6월 21일 (6개월간)

2016년 6월 22일 ~ 2016년 12월 21일 (6개월간)

3. 활동범위 및 소관부서

- 자치구별 균형발전 현황 관련
- 지역개발 투자현황
-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현황
- 한전부지 등 협상에 의한 도시계획 관련 및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
- 행정국(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재정담당관, 예산담당관), 평 생교육정책관(교육정책담당관), 도시재생본부(공공개발센터, 동남권공공개발 추진단, 동북4구사업단), 도시계획국, 마곡사업추진단, 지역발전본부

4.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구 분	일 시	의 사 일 정	비고
제1차 위원회	2015년 7월 9일 (목)	1.위원장 선임	장소 :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제2차 위원회	2015년 7월 30일 (목)	 업무보고자 업무보고자 행정국장(행정국) 재정기획관(기획조정실) 평생교육정책관 도시재생본부장 지역균형발전 관련사항 질의 	장소 : 시의회도사계획관위원회회의실
제3차 위원회	2015년 9월 16일 (수)	1. 업무보고	장소 : 시약회도소계획관리위원회회의실
제4차 위원회	2015년 12월 7일 (월)	1. 업무보고 ○ 업무보고자 - 재생정책기획관(도시재생본부)	장소 : 시약회도서부만라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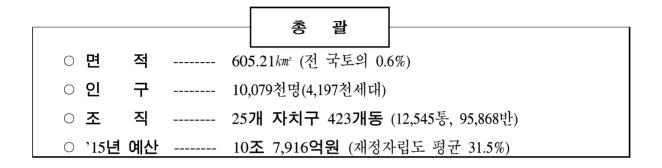
구분	일 시	의 사 일 정	비고
		2. 공공기여금 관련 입법동향,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관련사항 질의	회의실
제5차 위원회	2016년 6월 10일 (금)	1. 업무보고	장소: 시약회도사계획관리위원회회의실
제6차 위원회	2016년 11월 9일 (수)	 1. 업부보고자 ○ 업무보고자 - 도시재생본부 정책기획관 - 지역발전본부장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2. 신도시계획에 따른 대규모 부지별 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서울형 균형발전 정책 강화 관련사항 질의 3.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축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 채택 	장소 : 시약회도소계약관대원회회약실

Ⅲ. 특별위원회 활동내용

1. 기관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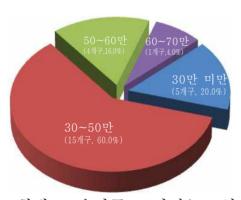
【행정국】(제1차 보고: 2015.7.30.)

1) 자치구 일반현황



□ 인구 현황 ('15.6월말 현재)

자치구별 - 평균 40만 3천명(168천세대)



※ 최대 - 송파구 66만명(258천세대) ※ 최대 - 양천구 신정3동 55,319명 최신 - 즉 그 12만명(60천세대) 최신 - 소파그 가라1도 1 020명 최소 - 중 구 13만명(60천세대)



최소 - 송파구 가락1동 1.030명

□ 자치구 행정인력 및 예산현황

○ **행정인력** : **정원 49,107명** (시 17,470명, 자치구 31,637명)

- 서울시 : 1실 8본부 7국, 144과·담당관, 3사업본부, 31직속기관, 43사업소

- 자치구 : 126국 774과·담당관, 25보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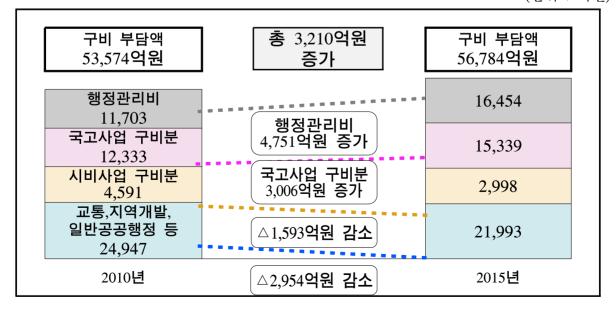
○ '15년 예산규모 : 10조 7.916억원 (자치구 평균 4.317억원)

◆ **조정교부금** : **2조 1.567억원**('14년 1조 9.763억원 대비 9.1% 증)

- 2) 자치구 재정현황
 - (1) 최근 5년간 자치구 재정실태
 - ◆ 자치구의 자체수입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나, 법정·의무적 경비 등 세출부담 은 급증해 재정악화 가속
- □ 최근 5년간 자치구의 부담액은 3,210억원 증가한 반면에, 자체 수입 증가는 199 억원에 불과하여 자치구 재정열악 가속화
 - 구비 부담액 : 3,210억원 증가 ('10년 53,574억원 → '15년 56,784억원)
 - 국고보조사업 구비매칭비 3.006억원 증가, 행정관리비 4.751억원 증가
 - 市사업 구비매칭비 △1,593억원 감소, 교통·지역개발 등 △2,954억원 감소
 - 서울시는 2011년, 2014년 2차에 걸쳐 시비보조금 제도 개선, 구비부담을 경감
 - 자치구 자체수입 : 199억원 증가 ('10년 35,787억원 → '15년 35,986억원)
 - 지방세는 2,528억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2,329억원 감소
- □ 자치구의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인건비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 치구에 대한 획기적인 재원확보 대책 필요

【 자치구 부담액 증감현황 】

(단위 : 억원)



(2) 자치구 재정력 격차

- ◆ 재정자립도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중으로 최근 3 년 간 10.3%p 하락('13년 41.8% → '15년 31.5%)
- ◆ 자치구의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 지표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는 최근 3년 간 4.1%p 증가('13년 93% → '15년 97.1%)

□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총계

-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최고, 최저 격차
 - '13년 격차 53.6%p (최고 강남구 75.9%, 최저 노원구 22.3%)
 - '14년 격차 47.1%p (최고 강남구 64.3%, 최저 노원구 17.2%)
 - '15년 격차 44.1%p (최고 강남구 60.0%, 최저 노원구 15.9%)
- 최근 3년간 자치구 재정자립도 10.3%p하락('13년 41.8% → '15년 31.5%)
 - 최근 3년간 자체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규모는 급증해 재정자립도 하락
 - 일반회계 규모 증가 주요 원인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기인함
 - 이에 따라 구비 매칭비도 증가했으나, 자치구 자체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움

【 **자치구 최근 3년간 세입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증 감
재정자립도	41.8%	33.6%	31.5%	△10.3%p
일반회계 총계 (①+②+③)	84,480	92,935	102,032	17,552
① 자체수입	35,333	31,226	32,123	△3,211
지방세	20,399	20,255	21,136	737
세외수입	14,935	10,971	10,987	△3,948
② 의존재원	49,147	57,071	66,098	16,951
지방교부세	964	1,031	1,083	119
조정교부금 등	17,377	18,182	19,768	2,391
국·시비 보조금	30,806	37,858	45,247	14,441
③ 보전수입 등(잉여금)		4,638	3,812	3,812

- ※ '14년부터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세외수입이었던 세계잉여금 등이 보전수입으로 제외
- ※ 합계 차이는 억원으로 단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올림으로 인해 발생

□ 기준재정수요층족도 현황

(보통교부금 교부 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보통교부금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 (기준재정수입액+보통교부금) / 기준재정수요액

- ※ 기준재정수입액 = 자치구의 일반재원(자체수입 +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 ※ 기준재정수요액 = 자치구가 기본적으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재정수요
-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 교부 후 충족도 4.1%p 상승('13년 93% → '15년 97.1%)
 - 매년 조정교부금 규모가 증가해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상승함
 - ① 조정교부금 교부율 0.5%p 인상('13년 교부율 보통세의 20.5% → '14년 이후 21%) 으로 인해 조정교부금 규모 증가
 - ② 중앙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14년, '15년 주택매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시세인 취득세 급증
- 다만, 조정교부금 증가요인(교부율 인상, 취득세 증가)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 망되므로, 향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현재 수준이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자치구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 교부 전 후 충족도 현황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TE	교부 전	교부 후	교부 전	교부 후	교부 전	교부 후
자치구 평균	65.7%	93.0%	66.3%	95.2%	66.7%	97.1%

- 따라서 강남구를 제외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채우지 못하는 24개
 자치구에 대하여 보통교부금의 추가교부를 통하여 세원편재와 재정력
 불균형의 해소가 필요한 실정임.
 - 최소한 '15년 현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97.1%를 100%수준으로 향상시켜 자치 구가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절실함.

- 3)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 ◆ 자치구간 세원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정한 수준의 자치구 행정능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재정부족액 보전

□ 조정교부금 재원 및 교부기준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 29조의2 등
- 재 원 : 보통세의 21%('15년 예산 21,568억 원)
- 교부기준 : 보통교부금 (총액의 90%), 특별교부금 (총액의 10%)
 - 보통교부금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교부
 - ※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에 보통교부금을 교부해 재원편재 및 재정력 불균형 해소
 - 특별교부금 :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수시교부(25개 區 대상)

□ 개선방안

- 자치구가 복지비, 인건비 등 급증으로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기준재 정수요충족도 100% 수준으로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 '16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기준재정수 요액, 기준재정수입액, 市 보통세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계한 조정교부율은 22.78%임 (보통세 21% → 22.78%, 증 1.78%)
- '16년도부터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달성하기 위해 학술용역을 통해 정확한 조정교부금 교부율(보통세의 교부율)을 산정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달성할 수 있는 보통세의 교부율을 정확히 산정한 후 시의회에 충분한 사전보고와 의견을 청취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4) 자치분권 추진과제

◆ 지방자치 출범 20주년을 맞이하여 시·자치구간 지속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재정분담 형실화 등 혁신적인 자치분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 자치분권협의회」구성 • 운영

- 위원구성 : 시·자치구 총 29명
 - 시(4): 시장, 행정1·2·정무부시장 / 자치구(25): 25개 자치구청장
- 주요기능 (분기별 1회 개최 원칙)
 - 자치부권 의제에 대한 정기적 협의
 - 실무협의기구로서 자치영향평가협의회. 자치분권 실무위원회 구성 · 운영

② 서울시「자치영향평가제도」도입

○ 시 정책 수립과정에서 자치구에 미치는 행정 및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 하고 갈등예방 및 조정방안 협의

◈「자치영향평가협의회」구성・운영(안)

- ▶ 위원구성(30) : 당연직 10명, 위촉직 20명
- · 당연직 r 서울시(4): 기획조정실장(위원장), 행정국장, 안건 실·본부·국장

└ 자치구(6) : 구청장협의회 회장단 부구청장(동대문, 종로, 도봉, 구로, 송파, 성동)

· 위촉직(20) : 분야별 외부전문가 pool 구성 20명

③ 생활밀착형 자치구 권한 확대

- 자치구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생활밀착형 사무에 대한 자치구 권한 확대
 - 예) 3,000 m²이하 소규모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림 심의 권한, 가로수 바 꿔심기 심의 권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단속권한
- '생활밀착형 권한위임 TF'구성을 통해 지속적 과제 발굴 추진

④ 자치구 재정강화를 위한 획기적 재원 지원제도 마련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술용역을 통해 정확한 조정교부 금 교부율 산정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획조정실】

▶ 보고 일자

제1차 보고	제2차 보고	제3차 보고
2015. 7. 30	2016. 6. 10	2016. 11. 9

▶ 제1차 보고 : 2015. 7. 30

1) 서울시 지역개발 투자현황

서울의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최근 5년 투자현황을 보고 드림

□ 도시개발특별회계 개요

○ 근거 : 도시개발법(제60조)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 목적 :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

- 도시개발계획, 도로 확장 · 유지보수, 공원 및 녹지 용지보상, 주요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투자

○ 회계 구조

- 세입 : 체비지 대부료, 체비지 매각수입,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등

- 세출 : 도시계획 관련 사업, 도로 유지보수, 공원녹지사업 등

〈도시계획시설 개요〉

○ 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

○ 서울시 도시계획 시설 현황(`14.12월 기준)

 구분(시설명)	개소	규모(km²)	비고
· 총 계	62,517	374.09	
교 통 시 설	54,942	105.64	도로, 주차장, 등
공 간 시 설	4,271	151.35	광장, 공원 등
유 통 공 급 시 설	494	7.11	시장, 전기, 가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2,266	39.91	학교, 도서관 등
방 재 시 설	200	61.11	하천, 유수지 등
보 건 위 생 시 설	22	0.89	화장시설, 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322	8.08	폐기물, 하수도 등

□ 최근 5년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황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은 최근 5년간 평균 1조원 규모
- 순수 도시개발분야 사업비는 최근 5년간 평균 0.8조원 수준
 - 도시계획시설은 대규모 건립사업의 마무리(DDP, 가락시장 현대화, 돔야구장 등)에 따라 시설 예산은 감소 추세이며, 여유재원은 타 회계 전출을 통해 광역도로, 철도분야에 투자
 - 도로 시설 및 공원분야는 연간 소폭의 증감이 있으나 평균적으로 일정규모 유지

(단위: 억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계	9,165	9,980	12,565	12,325	10,419
사업예산	8,936	7,871	9,253	7,826	8,575
도시계획시설 (경제,문화,복지등)	4,503	3,246	2,449	1,738	1,245
도로시설	2,812	2,983	5,142	5,015	5,850
공원·녹지	1,621	1,642	1,661	1,074	1,480
재무활동	228	2,109	3,312	4,499	1,843
예비비, 기타	228	2,109	55	49	52
타회계지원 등 (광역도로, 철도 등)	-	-	3,258	4,450	1,791

※ 주요 증감사유

- · 2012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여유재원 예탁 1.700억원
- · 2013. 9월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비를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으로 변경 (2013년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140억원)
- · 2013년도부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원

2) 중기재정계획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2015~2019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전망 및 계획 현황을 보고 드림

□ 중기재정계획 개요

○ 근거 : 지방재정법 제 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내용: 중장기 시정 비전 등을 반영한 市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용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는 법정 연동계획

○ 작성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계획기간 : 2015 ~ 2019년도(5개년)

- ('15년도) 2015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

- ('16년도 ~ '19년도) '1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 수립일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수립 (~ 9월)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재정관리담당관, 10월 말)
- 시의회 및 행자부 제출 (예산안 첨부, 11월)

□ 증기지방재정계획 반영현황 (도시개발특별회계)

- 기존 시설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로시설분야, 공원녹지 분야는 연평균 일정규모 수준으로 유지 필요
- 도시계획 시설 분야는 문화·체육, 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기존 도시계획 시설 건립사업 종료에 따른 여유 재원은 신규사업 투자비로 배분하여 증액 수요에 대응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57,241	10,419	11,776	12,002	11,813	11,231
사업예산	39,937	8,575	8,989	8,706	7,433	6,232
도시계획시설 (경제,문화,복지등)	7,328	1,245	2,101	2,381	1,596	6
도로시설	26,559	5,850	5,670	5,247	4,766	5,027
공원녹지	6,048	1,480	1,219	1,079	1,071	1,199
재무활동	9,272	1,843	2,204	2,035	1,796	1,393
예비비, 기타	184	52	36	34	32	30
타회계지원	9,088	1,791	2,168	2,002	1,764	1,363
신규사업 투자비	8,033	-	582	1,261	2,584	3,606

□ 향후계획

- 도로, 문화, 공원 등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의 특징에 맞도록 분야별로 지역균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반영 필요
- 객관적으로 지역적 균형을 검토하도록 분야별 기반시설 건립 계획 수립시 지역균형성을 자체 평가토록 추진
- 또한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시에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지역균형성을 조사 및 반영 추진

▶ 제2차 보고 (2016. 6. 10.)

1) 지역발전본부 신설경위 및 조직개편

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정비하고 단기간에 집중 추진이 필요한 분야의 기구를 한 시적으로 신설하여 시정성과 창출기반 마련

□ 추진배경

- 권역별 중심지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 도시계획국, 경제진흥본부 등과 협력으로 공간계획 및 전략산업 육성 연계
 ※ 문화시설건립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기구개편 병행
- 3급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기구 정비
 - 마곡사업추진단 '16.6.30字, 일자리노동국 '16.8.18字로 존속기한 만료
 - ※ '16.3. 행정자치부와 3급 한시기구 2개(지역발전본부, 문화시설추진단) 신설협의 완료

□ 조직개편 내용

- 4대 권역별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지역발전본부」 신설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잠실운동장 일대 사업 추진
 - 창동·상계 활성화 계획 수립, 서울아레나 건립, 플랫폼 창동 61 조성
 - 마곡산업단지 기업 투자유치 및 공공 산업지원시설 건립·운영* 마곡중앙공원 조성 및 운영은 업무 일원화를 위해 푸른도시국으로 이관
 - 수색역세권 일대 활성화 추진,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 공간 조성
- ○「문화시설추진단」신설 및 한시기구인 일자리노동국 정규기구화
 -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구상, 부지매입 및 건립추진 전 과정 총괄기구 신설
 - 일자리창출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개편

- ▶ 제3차 보고 (2016. 11. 9)
 - 1) 지역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간 추진하였던 지역 균형발전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주요 추진경과

- □ 뉴타운 개발사업
 - 기존 주택재개발 방식에서 탈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개선
 - 광역단위(생활권)의 계획적 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공공투자 증대
 -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주거중심형, 도심 형. 신시가지형 등 3개 유형으로 지구 지정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

- 자치구의 중심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 상업 업무 등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지원
 -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시 예산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입지 지원
 -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조정,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정비
-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03.3.15)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대상, 절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 조직 : 균형발전추진본부 ('07.1.2.~'10.9.26.) 〉 ─

▶ 도심활성화추진단

-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및 지원, 도심활성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등
- ▶ 뉴타운사업단
 - 지역균형발전 사업 종합관리,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 중점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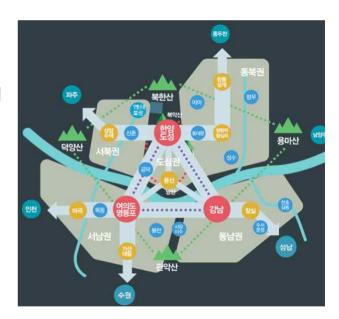
□ 균형발전을 반영한 도시계획 수립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방안 반영
 - 2030 서울플랜 : 20년 후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
 - 균형 있는 중심지 설정, 중심별 특화기능 육성을 통한 생활권별 자족기능 강화
- 중심지 체계 개편 ⇨ 3 도심 7 광역중심 12 지역중심
 - ▶ 3 도심 : 한양도성(세계적인 역사문화중심지), 영등포·여의도(국제금융중심지), 강남(국제업무중심지)
 - ▶ 7 광역중심 :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 ▶ 12 지역중심 : 동대문, 성수, 망우, 미아, 연신내·불광, 신촌, 마포·공덕, 목동,

봉천. 사당·이수, 수서·문정, 천호·길동

○ 5대 권역별 발전방향

- 도심권: 역사문화도심으로서의위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동북권: 자족기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경제 중심지 육성
- 서북권 : 창조문화산업(첨단 IT 등) 특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서남권 : 준공업지역 혁신을 통한 신성장 산업 거점 육성
- **동남권** : 국제업무·상업기능 강화 및 기존 주거지역의 계획적 관리



〈 ※ 참고 :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개요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04.4.1. 시행)
-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등
- 지역발전위원회(대통령 직속) : 정부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조정, 대통령 자문
- ▶ '서울시 생활권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중 ('14.9.2. 대외협력담당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설치
 - 주요 기능 : 서울시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생활권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조정

□ 낙후지역 도시재생 추진

○ 서울형 도시재생 비전 수립 및 1단계 도시재생사업 추진

정책방향 :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서울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

- 주거지 노후화, 지역 산업 쇠퇴 등에 대응한 도시재생 사업 지속 추진 필요
- '15.1월 도시재생본부 출범. '15.12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지정

○ 1단계 사업 : 낙후된 강북 도심부 위주로 13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

- 근린재생 일반형 :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성수동, 신촌동 등 8개소
- 도시경제기반형 : 서울역 역세권, 창동·상계 일대 등 2개소
-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 세운상가, 낙원상가, 장안평 일대 등 3개소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경과 〉

-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3.6월) : 도시재생사업 시행근거 마련
- ▶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국가 선도지역 지정 ('14.4월)
- ▶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플랜 발표(15.3월) :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 ▶ 도시재생전략계획(최초의 법정계획) 수립('15.12월)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지정
- ▶ 도시재생조례 시행규칙 제정('16.6), 2단계 도시재생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16.6월)

○ 2단계 사업 추가지정을 위한 대상지역(후보지, 희망지) 공론화 진행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후보지(8개소) 및 희망지(20개소) 분포 현황

▶ 도심권(4) : 중(1), 종로(2), 용산(1)

▶ 동북권(9) : 강북(3), 도봉(1), 노원(1), 성북(2), 동대문(1), 성동(1)

▶ 동남권(1) : 강동(1)

▶ 서북권(5) : 은평(2),마포(2),서대문(1)

▶ 서남권(9) : 강서(1), 양천(2), 구로(1).

영등포(1).금천(2). 동작(1).

관악(1)



□ 사회복지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 해소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16.5.19. 시행): 복지본부(복지정책과) 총괄 추진

※ 舊「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의 전부 개정

○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 구성 · 운영** (16.11.11. 위촉식 및 위원회 개최 예정)

- 기능 :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 자문

구성: 위원수 총 17명(위촉직 11명, 당연직 6명), 임기 2년

○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분야별 종합계획 수립

-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분야별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재정 지원

-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 등을 설치하여 자치구 및 법 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

〈※ 현재 추진사항 : 학술용역 진행 중 〉

▶ 용 역 명 :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 및 균형성 확보방안

▶ 추진목적 : 서울시 지역별 복지 인프라 수급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 및 시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용역기간 : 2016. 6월~ 2017. 3월(10개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책임연구원 : 김경혜 박사)

▶ 주요과업 내용

- 격차지표, 격차 영향평가 설계, 사회복지 인프라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균형배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2016. 11월 :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2017. 2월 :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및 결과 활용 보고

- 2017. 3월 : 사회복지 인프라 및 서비스 균형배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 '16년 기준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1.7%로 재정자립도가 40%를 넘는 자치구는 강남, 서초, 중구, 종로, 송파 등 7개에 불과
 -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 규모 × 100
 - ▶ 재정자립도 상위 5개 자치구('16년)
 - 강남(60%), 서초(57.9%), 중구(57.1%), 종로(50.4%), 송파(42.9%)
 - ▶ 재정자립도 하위 5개 자치구('16년)
 - 노원(17.7%), 강북(19.1%), 도봉(20.4%), 관악(20.7%), 은평(20.8%)

○ 조정교부금을 통한 재정격차 완화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15.12.31)하여 조정교부금 재원 확충('15년 대비 '16년 조정교부금 2.728억원 증액)
- '15년 대비 2,728억원 증액된 '16년 조정교부금을 각 자치구별 재정 상태에 맞게 차 등 교부하여. 전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 재 원 : 지방세 중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

▶ 지급기준 :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

○ 재정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세수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추진

- 현재 국세에 편중된(국세:지방세 = 8:2) 세수구조를 지방세 확대 방향으로 개편하여, 지 방재정분권 및 조정교부금 재원 확대
 - ▶ '13년에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 인상(11% → 16%) 및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 ▶ 국세 중 지역적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의 지방세 전환
- 통상 중앙 50%, 광역 25%, 기초 25%인 복지비 부담비율을 전액 국비부담하거나, 중 앙정부가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비율 재조정 추진

□ 권역별 지역발전사업 추진

(지역발전본부 신설 (2016.7.1. 조직개편)) -

▶기 능: 서울시 균형발전업무와 4대 권역별(동남·동북·서남·서북권) 개발사업 총괄

▶구 성: 2 사업단(동남권사업단, 동북권사업단), 2 과(서남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로 구성

① 도심권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 다시세운광장, 데크 정비, 공중 보행교 설치 등 종묘~세운상가군~남산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보 행네트워크 구축
- 세운협업지원센터, 세운리빙랩(Living Lab) 운영 등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거점공간 조성

▶ 1단계 구간 : 종묘 ~ 초록띠공원 ~ 세운상가군(세운·청계·대림)

- 규 모: L=420m. 폭 50~55m

- 사업비 : 535억원 / 사업기간 : '14.7 ~ '17.8

▶ 2단계 구간 : 세운상가군(삼풍·PJ·인현·진양)~남산

- 규 모 : 세운상가군 L=575m, 폭 50~55m / 퇴계로~남산 구간 L=1,200m, 폭 5m

- 추정사업비 : 438억원 / 사업기간 : '17 ~ '19

② 동북권 :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 창동·상계 일대 차량기지 이전 등을 통해 발생하는 대규모 부지를 활용, 수도권 동북부 320 만의 일자리·문화 중심으로 기능할 신경제 중심지 조성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 플랫폼창동61, 동서간 연결 교량 및 지하차 도 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 동북4구 플랜 실행과제 추진

▶ 위 치 : 도봉구 창동 및 노원구 상계동 일대

▶ 규 모 : 약 97만m²(개발 가용지 38만m²)

▶ 사업비 : 15.473백만원('16년)

▶ 사업기간 : '15년 ~ '25년

③ 동남권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서울의 새로운 중심으로 육성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현대차부지 개발, 잠실운동장 일대 시설 개발, 기반시설 확충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67 일대~송파구 잠실동 10 일대 등

▶ 규모 : 약 72만m²(계획범위 : 약 166만m²)

▶ 사업기간 : '14년 ~ '25년 / ▶ '16년 사업비 : 3,414백만원

4 서북권 : 수색역세권 광역중심 기능 강화

○ 수색역세권 일대 광역중심 기능 강화와 철도로 단절된 상암~수색 지역간 물리적·공간적 연계로 상암·수색 지역을 통합하는 서북권 핵심 거점 조성을 위한 수색역 일대 개발을 추진

▶ 위 치 : 은평구 수색로 261 일원(수색역·DMC역 일대)

▶ 규모: 323,013m²

▶ 사업기간 : '16년 ~ '30년 (차량기지 이전 : '25년)

5 서남권: 미래 서울 신성장 선도를 위한 마곡 첨단R&D 단지 조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R&D센터를 조성하여 국제적인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추진
- 토지 공급·관리, 공공산업지원 시설 건립, 특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 조성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일대

▶ 규모: 3.666천 m²(1지구 1.066천 m², 2지구 1.903천 m², 3지구 697천 m²)

▶ 총사업비 : 6조 6,134억원

▶ 사업기간 : '07.12.~'16.12.('16.10. 현재 단지 조성 공정률 97%)

※ '18.12.31.까지 연장 예정

3) 향후 추진계획

□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위한 선결과제로써 지역간 격차에 대한 현황파악 필요
- 지역간(동남권 vs 강북·서남권) 안전·복지·문화·재정 등 지표 발굴
 - 일반현황(인구·노령화·가구 등), 고용률, 임금수준, 사업체수 외에 안전, 복지, 의료, 주 거. 교육, 문화 등 시민체감 지표 발굴
- 실생활에서 균형 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각지대 적극 발굴
 - 예: 지하철 역사 E/V 설치의 지역 불균형('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

□ '균형발전'을 시정 핵심가치로 재확인

- 균형발전을 시정 핵심철학으로 설정하고, 市 전분야의 계획·정책에 반영
- 공간·시설측면 외에도 사회 서비스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적 정책 추진
 - 도시재생본부·도시계획국·지역발전본부 주관 공간·물리적 환경개선 추진과 더불어, 복지·건강·주거·교육 등 사회 서비스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 균형발전 총괄부서(기획조정실) 역할 강화

- **균형발전정책 총괄 및 정책 조정 강화** (기획담당관)
 - 고유업무인 정책 기획·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추진
 - 기획담당관 기획행정팀 업무분장 명시, 향후 필요시 팀 신설 검토
- **주요 지역균형발전 정책 평가 강화** (평가담당관)
 - 주요 지역발전사업 추진상황, 복지·건강·주거·교육 등 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추진실 적 정기 점검 및 평가 등

【도시재생본부 및 지역발전본부】

▶ 보고 일자

제1차 보고	제2차 보고	제3차 보고	제5차 보고	제6차 보고
2015. 7. 30	2015. 9. 16	2015. 12. 7	2016. 6. 10	2016. 11. 9

1)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시민이 사랑하고 세계가 모이는 서울의 새로운 중심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67일대 ~ 송파구 잠실동 10 일대 등

○ 규 모 : 약 **72만** m² (계획범위 : 약 166만 m²)

○ 사업기간 : '14 ~ '25년

○ **사 업 비** : **3.414백만원**('16년 예산)

○ 주요내용

-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및 도심형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 스포츠·대중문화 메카 및 한강·탄천 시민여가공간 조성, 대중교통 허브 구축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



〈현대차 부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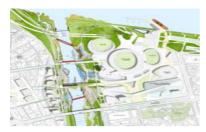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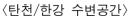
〈영동대로 복합개발〉

□ 추진현황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 코엑스~잠실운동장 종합발전계획 발표('14.4.)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및 명칭변경('15.5.)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16.8.~9.)
- 대중교통·보행중심공간 조성을 위한「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추진
 - 기본구상 발표('16.5.), 기본계획 수립용역('16.7.~'17.5.), 관계기관 추진협의체 구성· 운영('16.8.), 서울시-철도연 행정·연구협의체 구성('16.11. 예정)
 - ▶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6개 철도노선, 버스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널 등을 배치하여 동 남권 대중교통 허브로 육성
 - ▶ 광장, 문화·이벤트시설, 상업시설 등 시민 휴식 및 편의공간 조성
-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 MICE 및 여가·생태가 어우러진 복합단지 조성(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 발표. '16.4.)
 - 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16.7.~12.). 민간제안서 접수('16.10.) 등
 - ▶ 노후화된 스포츠 시설은 업그레이드하고 문화·상업 등 기능을 복합화하여 스포츠·문화복 합단지(Urban Sports Complex)로 재탄생
 - ▶ MICE 클러스터 조성, 서울만의 전시 브랜드 창출로 글로벌 MICE 밸리 구축
 - 올림픽대로 지하화 타당성조사('15.5.~'16.9.), 탄천/한강변 정비 기본계획('16.7.~'17.3.), 탄천 보행교 설치 타당성조사('16.7.~'17.1.) 등
 - ▶ 보행중심의 통합적 수변공간 및 생태거점 조성으로 여가·휴식공간 조성







〈보행전용교량 예시〉



〈주경기장 리모델링〉

○ 현대차부지 건립 추진 지원

- 현대차부지 사전협상('16.2.) 및 교통·전략환경 영향평가('16.7.) 완료, 도시·건축공동위 원회 심의·가결('16.9.) * '17년 상반기 착공 예정

○ 시민·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형 사업 추진체계

- 시민 아이디어 공모(127건) 및 국제 전문가 공모(98건) 실시('15.1.~9.)
-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구성('16.5.), 분과위원회 11회 개최('16.6. ~10.), 위원장 포함 추진위원 현장방문('16.8.)
 - ▶ 6개 분과/21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전용 홈페이지 구축, BI개발, 다큐제작, 홍보영상 제작 등 단계별·타켓별·매체별 맞춤형 홍보 와 시민참여단 활동을 통한 소통 강화

〈국제교류복합지구 배치도 및 조감도(예시)〉





2) 창동 •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현황

창동·상계 일대의 차량기지 이전 등을 통해 발생하는 대규모 가용부지를 활용, 수도권 동북부 320만의 중심지이자 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

(1) 동북4구 발전전략(행복4구 플랜) 추진

□ 동북4구(성북, 강북, 도봉, 노원) 특성

인구, 산업, 물리적 환경에서 소외된 지역 (Negative)	중심지 육성을 위한 발전 <mark>잠재력 풍부</mark> (Positive)
<i>사람이 모이지 않는</i> 도시	서울 및 수도권 동북부 320만 인구의 중심에 입지
 도시 한복판에 대규모 도심부적합시설 입지로 지역발전의 걸림돌 오랜 기간 시설이전 지연 및 개발정체로 주민 소외감 상실감 심화 	• 의정부, 남양주 등 수도권 동북부 주요 도시와 도심을 연계하는 관문 • 통일 후,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계되는 경원선의 시발점
<i>질밖에 없는</i> 도시	천만명이 방문하는 국립공원 등 풍부한 자연환경
 주거 위주의 개발로 일자리 부족, 도심 의존 장거리 교통량 증가 경제적 활력 권역 최저 (고용밀도, 건축허가 실적, 재정자립도 고려)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도봉산 및 중랑천 등 자연환경으로 풍부한 문화·관광 잠재력 •선잠단지, 4.19묘지, 태릉 등 역사자원 보유
<i>물리적 환경이 열악한</i> 도시	전국 최다의 대학·인적·기술적 자원 보유
 차량기지, 고가철로 교각 등 노후 시설로 인한 보행 불량, 경관 악화 철로, 동부간선도로로 인한 동서간 도시공간 단절 	• 15개 종합대학 입지, 연간 3만명 졸업, 서울시내 대학 특허권의 25% 보유 • 홍릉 일대 다수의 연구소 밀집

- **2년여 과정을 거쳐 '협력적 지역발전 정책' 마련·제안**('13.9)
 - 동북4구(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및 지역의 대학, 활동가 등이 모여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
 - 「동북4구발전협의회」및 「동북4구발전연구단」및 「지역주민」등이 함께 약 20여 개월 동안 발전방안(안)을 마련하여 우리시에 제안
 - 동북4구, 대학, 풀뿌리활동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지역발전 논의 시작 ('11.10)
 - 동북4구 발전협의회 MOU 체결 및 본격적인 논의 추진 ('12.5~)
 - 동북4구-서울시 공동협력기구 구성·운영 등 시-동북4구 간 협력·지원 체계 마련 ('12.5~)
 - · 『동북4구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 ('12.10∼'13.12) : 동북4구발전사업연구단
- 다양한 주체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합의된 서울시 최초의 '협력적 지역발전전략' 『행복4

구 플랜』마련('14.1)

- 제안 내용을 토대로 '시-동북4구협의체-연구단' 등 다양한 주체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합의된 서울시 최초의 '협력적 지역발전전략' 「행복4구 플랜」수립
- 동북4구의 제안내용을 협력·지원하여 발전계획 확정·발표 ('14.1)



- 3대 정책방향, 7개 핵심과제, 72개 실행과제 선정

정 책 방 향	핵 심 과 제		
	1.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1.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도시계획 제도적 지원		
	3. 중랑천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 기반 강화		
2.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4. 지식·교육 특성화		
	5. 자연·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3. 지역현안의 해소	6.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		
5. 지역원인의 애포	7. 생활기반시설 개선		

- **사업추진 전담조직 구성·운영**('14.7~)
 - 동북4구사업단

(2)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및 노원구 상계동 일대

○ 규 모 : 약 97만m² (개발가용지 38만m²)

○ **사 업 비** : 15.473백만원 ('16년 예산)

○ 비전 및 추진목표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 단기 사업추진 가능부지 선도사업 추진으로 사업 조기 가시화
 - 화승주차장부지 등 : 창업지원시설 및 문화예술공간 등 '17년부터 공사착수
 - ▶ Boom-Up사업으로 컨테이너를 활용한 "플랫폼 창동 61" 사업 추진 ('16.4 본격운영)
 - 문화체육시설부지 : 민자유치를 통해 국내 최초 아레나급 복합문화시설 건립
 - ▶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아레나' 건립 추진 및 주변을 문화예술거점으로 조성
- 2단계 : 중장기 개발부지는 유기적 협업을 통해 단계적 추진기틀 마련
 - 차량기지 : 차량기지 이전('19년말)과 동시에 개발을 위한 구상안 마련
 - ▶ 일자리창출 및 지역발전을 견인할 글로벌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등
 - 면허시험장 : 관련기관 간(경찰청, 노원 도봉구, 도로교통공단 등) 이전협의 적극 추진
 - ▶ 차량기지개발과 연계, 복합비즈니스 지원기능 도입
 - 농협하나로클럽 : 농협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발방안 마련
 - ▶ 쇼핑·여가 중심의 글로벌 라이프존으로 구성
- 3단계 : 환승주차장 일부 KTX 연장 대비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 주요사업 추진현황

- ^(가칭)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 사업개요

·규 모: 아레나공연장(1.8만석), 유스호스텔·영화관, 복합몰 등

·방 식 : 민간최초제안형 BTO방식, Fast-track으로 추진

·총사업비 : 4.800억원 (전액민자)

- 추진실적

·'15.11.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16. 1.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검토 의뢰 (서울시→PIMAC)

· 16.2.~11. 현재 : PIMAC 적격성검토 중

- 향후계획



- ※ **동북권체육공원 조성** (창동운동장 체육시설 이전)
 - · '15. 7. : 창동운동장 체육시설물 이전계획 수립
 - ·'l5.11.~'l6. 6.: 설계용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 · '16. 7.~'17. 3. :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및 보상시행중
 - · '17. 4.~'17.12. : 공사시행 (1단계구간은 '16.12.착공)

○ 창동 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및 노원구 상계동 일대
 - ·규 모 : 활성화지역 약 97만m²(집중사업지역 57만m²+활성화연계지역 40만m²)
 - ·내 용 : 도시재생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추진실적

- · '15. 4. : 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국비 매칭 220억원)
- · 15.12.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지역 지정)
- · '16. 2./ 9. : 국토교통부 1차·2차 관문심사 통과
- · 16. 4. :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도시재생특위)
- · 16. 7.~ : 공청회개최 및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기관(부서) 협의 진행중

- 향후계획

- ·'16.11.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위원장 : 국무총리)
- · 16.12.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및 고시·열람

○ 플랫폼 창동 61 조성·운영

- 사업개요

- · 위 치 : 도봉구 마들로11길 74 (창동환승주차장 부지내)
- · 규 모 : 연면적 2.456.73m². 지상3층. 컨테이너 61개
- · 공간구성 : 음악,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

- 추진실적

- · '15. 3 : 창동환승주차장 내 박스파크 조성 추진계획 방침
- · '16. 4 : 플랫폼 창동 61 공사완료 및 개장식('16.4.29)
- · '16. 8.~9. : 창동 썸머 패밀리 페스타 및 시민페스티벌, 도시재생의 날 개최

※ '16.4.~10. 공연, 교육, 전시, 푸드, 패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18만여명 방문

- 향후계획

- 2016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지속적인 붐업사업 추진
-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와 홍보를 통해 동북권지역의 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

○ 동서간 연결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계획 수립

- 사업규모 : 동서간 연결교량 2개소(보행전용폭 10~15m, 차도교량폭 30~35m)

동부간선도로(창동교~상계교간)지하차도 설치(폭15~20m, 연상610m)

- 추진현황 :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중 (16.3.~17.1.)

- 향후계획: '17년도 기본설계용역 시행 예정

○ 기타 "동북4구 플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현황 : 총 72건중 31건 완료, 추진중 37건, 장기검토 4건

- 2016년 완료(예정) 사업: 8건

연번	건 명	추진부서	추진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1	역세권(경전철)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관리방안 마련	생활권계획추진반	'13 ~ '16	6,351
2	서울 창포원주변 대전차방호시설 환경개선	문화정책과	'14 ~ '16	3,821
3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	자연생태과	'13 ~ '16	8,315
4	서울과학관 건립	경제정책과	'14 ~ '16	47,076
5	둘리뮤지엄과 연계한 만화거리 조성지원	문화산업과	'14 ~ '16	1,000
6	월계동 청백@~초안산체육공원 도로개설	도로계획과	'14 ~ '16	2,200
7	동북4구 산·관·학 연계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경제과	'15 ~ '16	700
8	전세대 평생학습공간 '모두의 학교' 설립	평생교육담당관	'16.3 완료	_

※ 장기검토(4건) : 추진일정 또는 부지 미확정 사업

· KTX 연장, 안암동 인권마을 조성, 강북 체육시설 건립, 경원선 지하화

(3) 향후 동북4구 발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

그 간의 여건 한계로 인해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에만 집중해왔으나, 향후 지역협력 거버넌스 활용을 통해 동북4구 전체를 이우르는 광역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 추진실태

- 그동안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집중 매진
 - 조직·인력, 예산, 시간적인 여건 한정
 - 동북4구 전체 권역을 아우르는 실행과제 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 등에는 한계

▶ 앞으로의 발전 추진방향

- 동북4구 발전을 위해 관련 민·관 조직·단체간 광역적 거버넌스 구성·협업
 - 서울시 ⇔ 동북4구 ⇔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 산학협력단 등
- 동북권 미래 비전을 위한 상생협력의 공유경제 실현
 - 자치구별 개별적 '행복플랜' 사업에서 동북4구 권역 전체에 미치는 광역적 종합 발전계획 수립 및 실현 추진
 - 동북4구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각종 자원 및 시설을 연계,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스토리** 텔링하여 지역 명소화

❖ 동북4구 발전을 위한 최근 노력들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15.6~): 센터장(한신대 정건화 교수)
- 동북4구 발전협의회('15.10.16) : 행정1·2부시장, 동북4구 구청장
- 동북4구 컨퍼런스 개최('15.11.24) : 동북4구 발전을 위한 주제별 토론 및 심포지엄
-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용역 발주 중('15.11) : 다양한 자원조사 및 신규과제 발굴 등



320만 메갈로폴리스, 수도권 동북부 생활의 중심

〈연차별 추진계획 및 조감도(안)〉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플랫폼 창동 61 (붐입사업)						
환승주차장일대	사업구상(인) 마 타당성조사 동		설이전 및 부개발 계획수립	창업단/ (공공문회사설	지조성 건립동시진행)		
					KTX연장·GTX신설	복합환승센터 개발(장기)	
문화체육시설부지	민간제안서 접수	민자작성조사 제2 기획재정부PIMAC	자제안 공고 사업자선정 및 협약체결	서울아리	나 복합문 화시설 조성		
하나로클럽부지	농협중앙회 개발 혐의 및 개발구상(안) 마련			세부개발 계획수립	복합유 개발시	통센터 업추진	
창동차량기지		진접치량기지 건설 개발	및 청동차량기지 이전공사 가상(안) 마련		세부개발 계획수립	투화산업 집적지조성	
및 도봉면허시험장				발청) 이전 혐의 및 구상(안) 마련	세부개발 계획수립	목합상업단지개발	

○ 조감도(안)



3) 마곡 첨단 R&D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신개발지인 마곡지구를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첨단산업 R&D 중심의 미래지향형 자족적 복합단지로 개발

□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일대

○ 면 적: 3.666천 m²(1지구 1.066천 m², 2지구 1.903천 m², 3지구 697천 m²)

○ 총사업비 : 6조 6.134억원

○ **사업기간** : '07.12. ~ '16.12.('16.10.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 97%)

※ '18. 12. 31.까지 연장 예정

□ 지구별 주요 추진현황

○ **1지구(공동주택)** : **12.015세대**(분양 6.008, 임대 6.007)

- 1단계('11.9. ~ '14.6.) : 9개 단지, 6,730세대 완공

- 2-1단계('13.12. ~ '16.7.) : 4개 단지, 1,791세대

※ '16.10월말 기준 1.279세대 입주(입주율 71.4%)

- 2-2단계('15.1. ~ '18년 이후) : 3개 단지, 3.494세대 사업 진행 중

○ 2지구(산업시설용지 토지분양 및 착공)

- 토지분양 : 104개 기업과 483천m² 입주계약(총 730천m²의 66.2%)

- 착·준공 현황 및 계획

착 공	장		
○ '15년이전(36개) : LG, 롯데, 코오롱,	○ '16년(11개) : TK케미칼(1월),메이비원		
이랜드 등	(6월), 웰스비이오(8월) 등		
○ '16년(20개) : S-오일, 화천기공 등	○ '17년(43개) : LG(1차), 코오롱, 롯데,		
○ '17년 이후 (44개) : 넥센, 아워홈,	S-오일(1차) 등		
귀뚜라미 등	○ '18년이후(46개) : LG(2차), 이랜드 등		

⇒ '17년부터 본격적인 기업 입주에 따라 관리기구 구성을 통한 전문적 기업지원 추진

- **3**지구(서울식물원) : 푸른도시국으로 업무 이관 (16. 7. 1.~)
- 조성내용 : 503천m² (도시형 식물원 + 호수공원)
 - 공간구성 : 식물원, 호수공원, 열린숲공원, 습지생태원
 - · 주요시설 : 온실 등 식물문화센터, 한강보행교, 나들목, LG아트센터 등
- 추진계획
 - · '17.10. : 공원 부분개장(식물원 제외)/ '18.5. : 공원 전체개장(예정)

□ 주요사업 추진내용

○ 첨단 산업기술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곡개발 2단계 실행전략 수립

- 마곡개발사업 중간평가(추진실적 분석 등) 및 미래상 반영 실행방안
-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강소기업 임대공간 및 지원시설(공공형 지식산업센터,도전숙 등) 설치방안
- 미래 산업동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유보지 검토 및 임시활용 방안 등

○ 융합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추진

- 규모·재정적 한계가 있는 강소기업 등에 R&D단지 입주기회 제공
- 시설규모 : 토지 3.528m². 건물 연면적 21.680m²(사업비 766억원)
- 시설기능 : 공동연구, 창업보육 등 강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 공공기여를 통한 (가칭) LG 아트센터 건립

- 문화시설의 기부채납을 통해 서남부 지역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
- 마곡지구 서울식물원 부지 내 대극장, 사이언스 홀 등(35,500m² 규모)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6.21.)을 거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완료

○ 마곡지구 대표 브랜드 네이밍 및 BI 개발

- 주거단지 등 개별 브랜드 형성 중에 있으나. 마곡 전체를 대표할 브랜드 개발 필요
- 마곡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

○ 국내외 우수기업 전략적 중점 유치 마케팅 추진

- 업종·규모별 다양한 형태의 투자설명회 개최(정기설명회, 찾아가는 설명회 등)
- 국내 잠재 투자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210개사 관리 및 맞춤형 밀착 마케팅
- 외국상공회·협회 및 글로벌기업(153개사) 대상 홍보활동 전개

○ 마이스(MICE)단지 조성계획 추진

- 마이스 시설 등 복합개발 유도를 위한 특별계획구역(82.724㎡) 지정
- 컨벤션,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과 같은 필수 공간 및 전략적 유치가 요구되는 도입시설 계획수립
- 대규모 용지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사업화 모델 방안 연구용역 발주 (SH)

○ 기반시설 구축 및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

- 대중교통 중심지역인 마곡광장을 문화가 있는 썬큰형(지하 지상 통합) 공간으로 구성 (규모: 12.979㎡, 사업비 461억원)
- 마곡 1·2 빗물펌프장을 당초 강우강도 10년 빈도→ 30년 빈도로 수방기능 향상
 (사업비 565억원) 및 재생수 도입으로 물순환 도시 조성
- 5호선 마곡역 및 9호선 마곡나루역 출입구 추가증설, 공항철도 마곡역 건설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대

4) 수색역 일대 개발계획 수립

수색역 일대 개발을 통한 광역중심 기능 강화, 단절된 상암~수색 지역간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민간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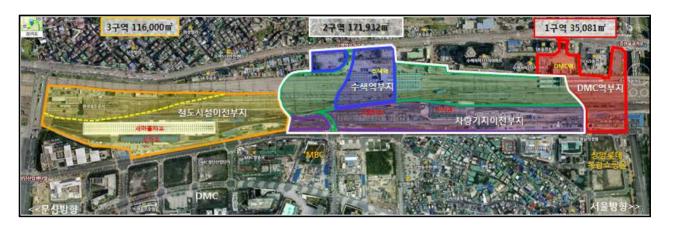
□ 사업개요

○ 위 치 : 은평구 수색로 261 일원(수색역·DMC역 일대)

○ **사업기간** : **2016년~2030년**(차량기지 이전 - 2025년)

○ 공간적 범위 : 323.013 m²

구역명	합 계	합 계 1구역		3구역
위치	-	DMC역 구역 (선도사업 추진)	수색역 및 차량기지이전구역	철도시설 이전구역
면 적	$323,013m^2$	$35,081{\it m}^{\scriptscriptstyle 2}$	171,932 <i>m</i> ²	116,000 m²



□ 그간 추진경위

○ `13. 8.~'14. 9. : **수색역세권 개발가이드라인 수립**(서울시)

○ `14. 5.~ 8. : 수색역세권 일대 민간사업자 공모(코레일, 유찰)

- 수색역 일대 전체(수색역~차량기지 이전구역~DMC역)를 대상으로 공모

○ `14.10.~`15. 4. : 수색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 실무협의

- 대규모 철도역세권 개발사업 방식 조정 필요(사전협상→도시개발사업)

○ `15. 7. 27. : 수색역세권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市-코레일)

- 수색역 및 차량기지 이전구역 도시개발사업 검토, DMC역 선도사업 추진

○ `15. 7.~11. : 수색역세권 DMC역 구역 사업자 공모(코레일)

- 롯데쇼핑(주)를 민간사업자로 선정('15.12.17)한 후 현재 협상 진행 중

○ `16. 9. 6. : 서울시-코레일 간 공동용역 협정서 체결

- 서울시-코레일 1:1 매칭, 분담율 각 50%, 협의체 대표기관 서울시

○ `16. 9. 28 : 市 - 코레일 공동용역 발주 및 입찰공고

市-코레일 공동용역 개요

■ 용 역 명 : 수색역 일대 개발전략 및 사업추진방안 수립 용역

■ 용 역 비 : 4.5억원(시-코레일 1:1 매칭, 분담율 각 50%)

■ 용 역 사 : ㈜유아컨설턴트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용역기간: 2016.11~2017.10

■ 과업범위 : 323,013㎡(수색역~차량기지 이전구역~DMC역구역)

■ 과업내용 : 수색역 일대 비전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마련, 수색역 일대 통합개발 전략 및 실현

가능한 사업화 방안 마련, 공공기여 부담방안 결정 등 사전협상 방안

□ 현안사항

-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DMC역 개발 우선협상자인 롯데쇼핑㈜의 내부사정으로 코레일과 의 상호 협약체결 검토 지연
- 수색역 일대 차량기지 및 철도시설 재배치
 - 코레일에서 "차량기지 효율적 배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차량기지 재배치
 - 용역 결과에 따라 차량기지 및 철도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승인 필요

□ 향후계획

○ `16.11.~`17.10. : 수색역 일대 개발전략 및 사업추진방안 수립 용역 시행

○ `17년중 : DMC역구역 사전협상 개시

5)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40년 이상 자동차산업 중심지인 장안평 일대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협력적 지원방안 모색

□ 주요 내용

- 중고차매매시장과 부품상기단지의 순환개발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거점개발
 - 자동차산업 관련 필수기능, 자동차박물관 등 상징기능, 호텔 등 지원기능 도입
- 물재생센터, 서울재사용플리자 등과 연계 특화된 지역특성 강화방안 마련
- 공공시설 정비. 문화기능 및 앵커시설 도입 등 지역산업 환경개선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 계획범위 : 동대문구/성동구 장안평역 일대

◆ 용역기간 : '14.5.9 ~ '16.1.8

◆ 용역업체 : 아름 + 선진엔지니어링

◆ **소요예산** : 513백만원 ('14년 200백만원, '15년 313백만원)

6)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

남산 예장자락의 재생을 통해 남산 방문객의 이용 편익 및 공익성 증대와 함께 남산의 자연환경 회복

□ 사업 개요

○ 위 치 :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대 (부지면적 27.377 m²)

○ 사업내용 : 공원·주차장 조성, 친환경 곤돌라 신설

- 남산 예장자락의 자연경관 회복 및 도심부에 시민 휴식공간 제공

- 관광객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는 곤돌라 설치 및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

○ 총사업비 : 450억원 ('15년 예산 : 시비 23.5억, 국비 20억)

○ 사업기간 : '15. 1. ~ '17. 12.

□ 추진 현황

- 분야별 전문가 자문(면담) 실시 ('15.4월, 6회)
 - 역사, 문화·생태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견 수렴
- 기본계획수립용역 계약 (제일ENG,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15.4.2)
- 대시민 공개토론회 개최 ('15.7.7)
 - 시민 및 전문가 참여하여 남산 예장자락 재생방향 논의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5.7.21)
-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가결 (행자부 / '15.7.24)

7)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협상절차를 통해 개발계획의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 성을 사전에 확인 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

(1) 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 사용범위, 법령 개정 추진현황

- □ 공공기여 관련 규정
 -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제12호~제15호)
 - 공공기여 제공범위 및 방법
 - ①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하도록 시설 부지·설치 제공
 - ②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관할 시·군·구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시설 설치·비용 제공

제 공 범 위	제 공 방 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①기반시설 부지제공, ②기반시설 설치제공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자치구내	①기반시설 설치제공, ②기반시설 설치비용 제공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배수구역 내(자치구 내·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공

-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제정('14.3.20)
-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건의안(서울시→국토부. '15.6.18)
 - 관련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제14호
 - 주요내용 : 공공기여 제공방법 및 범위 확대
 - ① 기반시설 제공범위를 동일 생활권 범위(특별시·광역시)로 확대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도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허용
 - ③ 기반시설 이외 "임대주택, 기숙사 등" 공공성 있는 시설 제공 허용
 - 추진경위
 - '15. 6. 18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건의 (서울시→국토교통부)
 - '15. 7.~ '16. 4.: 서울시-국토부 실무협의(4회) (담당 과장)
 - '16. 1. 25: 공공기여 확대 등 토론회 개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16. 8.~ '16. 9.: 국무조정실 지자체 건의규제 조정회의(2회)

▷국무조정실 : 구역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허용 재검토 필요

○ 국토부 입장

- ① 공공기여 제공범위 확대(서울시 전역)는 지자체간 갈등 유발로 부정적
- ② 구역내 기반시설 설치비용(현금) 납부 허용시 사업자 부담 가중
- ③ 기반시설 외 임대주택, 기숙사 등 허용은 중장기적 검토 필요

《 참고 : 국토계획법 일부개정 추진경위 》

발 의 일 : '15.9.15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 관련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 법 제52조 신설

❖ 주요내용 : 공공기여 제공방법 및 범위 확대

- 서울시 시행령 개정건의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 개정추진

♣ 추진경위

- '15. 9. 15 : 국토계획법 일부개정안 발의

- '16, 5, 30 : 19대 국회 위기만료로 **법안 자동 폐기**

(2) 사전협상제도 대상지별 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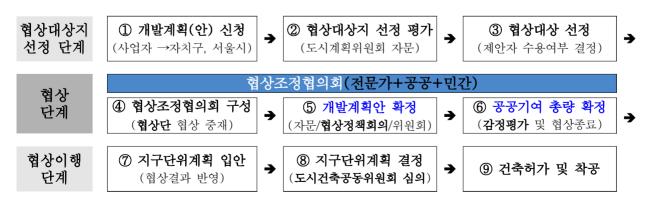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협상 대상지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 사전협상제도 개요

(목적)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상) 개발 잠재력이 있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내용)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협상절차를 통해 개발계획의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 후 도시계획을 변경



□ 사전협상 추진경위

○ '09. 2. : 新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

○ '09. 3. ~ 6 : 신청서 접수(30개소) 및 타당성 평가, 대상지 선정(16개소)

- 타당성평가 결과 : 조건부협상(16), 협상유보(10), 협상불가(4)

○ '09. 6. ~ : 협상대상지(16개소) 제안서 접수 등 협상진행

제안서 접수(10), 제안서 미접수(2), 제안철회(4)

○ '15. 3. :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2차)

- 협상대상지 정비 : 유보·타사업추진 대상지 제외한 협상준비중인 10개소만 관리

- 기존 협상대상지 2년 경과규정 적용(협상착수 '17.3限)

○ '09.12. ~ : 협상완료(4개소) 등 사전협상 지속 추진

- 협상완료(4) : 강동 서울승합, 마포 홍대역사,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강남 현대GBC

○ '16. 8. 15 :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3차)

- 공여시설 구분 폐지, 공공기여 제공방법 개선(위탁) 등

□ 대상지별 추진현황

○ 협상완료(4개소)

구분	대 상 지		토지소유자 (협상주체)	주요 협상내용	향후 추진계획
1	강남구	GBC부지 (구.한국전력)	현대차그룹	위원회 심의완료(`16.9)	건축허가 준비
2	강동구	서울승합	서울승합	위원회 심의완료(`12.10)	건축허가 준비
3	마포구	홍대역사	한국철도공단 (마포애경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14.4)	착공(`16.6)
4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서부티엔디	지구단위계획 결정(`14.4)	착공(`14.7)

○ 협상준비중(9개소)

구분	대 상 지		토지소유자 (협상주체)	주요 협상내용	향후 추진계획
1	노원구	광운대역사	코레일	사업자(코레일) 요청으로 협상보류	
2	노원구	광운대물류시설	코레일	코레일 사업방식 변경 검토중	
3	서초구	롯데칠성	롯데칠성음료	민간사업자 제안서 보완 중	
4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한진중공업	민간사업자 제안서 보완접수('16.7.8) 후 관련부서 검토/협의중	사업제안서
5	서초구	남부터미널	㈜서울루첸	민간사업자 제안서 보완 중	제출시 협상 추진
6	도봉구	성대야구장	학교법인 성균관대	민간사업자 제안서 작성 중	변 6 T선
7	강남구	舊한국감정원	삼성생명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대외발표('14.4)	
8	은평구	수색역세권	코레일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대외발표('14.2), 코레일 사업자 재공모 준비중	
9	성동구	삼표레미콘	현대제철	상위계획 불부합 등으로 협상 중단	

□ 향후 계획

- '16.11월~ : 사전협상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추진(용역)
 - 사전협상 추진 지원 : 사전협상 제안내용 및 공공기여 검토
 -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제도 개선 및 확대시행 방안 마련

【평생교육정책관】(제1차 보고: 2015.7.30.)

1) 서울시 공교육 현황

○ 각급 학교·학생현황

(단위:개교/천명)

od E	계		<u>:</u>	초		중		고	
연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2015년	1,301	1,022	599	451	384	263	318	308	
 2014년	1,300	1,065	599	458	383	287	318	320	
2013년	1,297	1,107	597	469	382	304	318	334	

※ 고등학교(318개교) : 특수목적고 20, 특성화고 71, 자율고 43, 일반고 184

○ 정책 현황

- 지역 간 교육재정 및 계층 간 소득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 강남권과 비강남권 교육재정 격차 2:1(강남권 104억원, 비강남권 59억원)
 - 소득 7백만원 이상과 소득 1백만원 미만 간 사교육비 격차 6.3:1 ('12년 통계청)
 -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7백만원 이상 426천원, 1백만원 미만 68천원
-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학교밖 활동 및 전인교육에 대한 요구 증대
 - 市의 가장 큰 교육문제로 '청소년이 공부 외에 할 만한 일이 없다'고 응답 : 37%
 - 전인적 성장 지원체계 구축이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 33%
 - ※ '13년 12월, 500인 시민원탁회의 사전설문 조사, 시민 847명 응답
- 학교폭력 건수 감소 추세에도 학부모 불안감 증가
 -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율 0.7%p. 가해율 0.4%p 감소
 - ※ 피해율 : 1.9%('13년) → 1.2%('14년). 가해율 : 1.0%('13년) → 0.6%('14년)
 - 학부모 불안감 : 32.8%('09년) → 38.1%('10년) → 41.7%('11년) → 43.2%('14년)

2) 주요업무

1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① 조례상 전출금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추진
 - ◆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조례상전출금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의 개 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 교육지원사업(조례상 전출금) 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지원대상 : 유치원과 유치원생, 각급 학교(초·중·고)와 학생
 - O 지원규모 : 40.459백만원(본예산 세입 중 보통세 0.4% 이내)
 - 일반교육지원금(90%) : 36.413백만원
 - ▶ 학습준비물 지원,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학교화장실 개선 등 12개 사업
 - 특별교육지원금(10%) : 4,046백만원(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가 있는 사업)
 - 추진절차 :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10월) → 예산안 제출 및 심의(12월) → 기본계획 변경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 → 사업비 전출 및 집행(익년 3월~)
- □ 추진현황
 - O 개선사항
 - 특별교육지원금 지원 시기 조정 : 연 1회(11월) → 연2회(4월, 9월)
 - 교육지원사업 예산집행 실태점검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육지원 사업별 모니터링 강화
 - O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회
 - 1차('15, 3,24) : 학교 화장실 개선 대상 20개교 선정 등 5건 심의
 - 2차('15, 5.15) : 특별교육지원 사업 대상학교 선정 등 2건 심의
 - O 전출실적('15.6월) : 24.634백만원(조례상 전출금 총 40.459백만원 대비 60.9%)
 - 12개 사업비 지원 중 (학습준비물 지원은 '15. 7월말 지원 예정)
- □ 향후계획
 - O 2차 특별교육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비 전출 : '15. 9월

○ 교육지원 사업 예산집행 실태 등 모니터링: '15. 10월~

②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 지역여건을 반영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및 교육 인프라 체계화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1개 자치구(혁신지구형 7. 우선지구형 4)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해 제안서 심사 후 선정(지정기간 2년)

O 사 업 비 : 6.450백만원(시비/ 혁신지구형 5.250, 우선지구형 1.200)

O 사업내용

구분	혁신지구형	우선지구형
필수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사업(중학교) 학교·마을 연계 방과후 사업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 민관 거버넌스(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 	• 민관 거버넌스(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 • 학생의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지원사업
특화	• 자치구 특화사업	•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 예산	• 사업비 : 총140억원 (1개구당 20억원) ※ 시 7.5억원, 교육청 7.5억원, 구 5억원(1개구당)	• 사업비 : 총12억원 (1개구당 3억원) ※ 전액 시비 지원

□ 추진현황

- O 혁신교육지구 11개구 선정('15. 1.23)
 - 혁신지구형(7개구) :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구로, 금천, 관악
 - 우선지구형(4개구) : 종로, 서대문, 동작, 강동
- O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19명) : 서울시(평생교육정책관·자문관), 교육청(기획조정실장·국장), 시의원(행자위2·교육위2), 자치구대표(11)
 - 1차 운영위원회 회의(5.20) : 운영위 역할정립, 조례TF팀 구성 등
- O 혁신교육지구 실무추진협의회 운영('15.3~6월)
 - 자치구 월1회 순회운영(현안사항 토론 및 협의)
- O 혁신교육지구 워크숍 개최('15.7.20~21)
 - 약250명 참석(혁신교육지구 민-관)/사업주체간 상호이해 및 협력방안 모색

③ 안정적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을 통해 건전한 심신발달 및 가정경제 부담 경감으로 교육복지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립초, 국·공·사립중, 저소득층 고교생

○ **지원인원** : **762천명**(초 434천명, 중 271천명, 저소득층 고등학생 57천명)

○ 급식단가 : 초등 3.150원, 중 4.170원, 저소득층 고 4.000원

○ **사 업 비** : **4,942억원**(재정분담 비율 : 시 30, 자치구 20, 교육청 50) ※ 저소득층 고 : 전체 고등학생 중 시교육청 지원(16.2%)의 서울시 추가 지원(3.3%)

 구 분	지원인원	편 성 액 (억원)					
ТЕ	(명)	계	교육청(50%)	市(30%)	구(20%)		
합계	761,946	4,942	2,601	1,431	910		
초등학교	434,000	2,570	1,285	771	514		
중학교	271,000	1,978	989	593	396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56,946	394	327	67	_		

추진현황

- 2015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831억원('15. 6월, 집행률 58%)
- 학교 급식시설 현장 위생점검 : 683개교('15, 3월, 점검률 55%)
- 친환경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교육 및 발대식 : 503명('15. 4.7)
- \circ 무상급식비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합동점검(50개교) : 1 15. $5\sim7$ 월
- 무상급식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실태 등 서울시-교육청-자치구 TF 합동점검
- 친환경유통센터 전국 최초 국가공인 인전성 검사기관 지정 : 중금속('15, 6.15)

Ⅱ 저소득층 장학사업 추진

◆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장학사업을 지속 적으로 실시하고 민간 기탁금 확대 노력

□ 사업개요

O 시 출연 장학사업 : 3개 분야 10.554백만원 (16.940명)

구 분	고 i	2	다	재 능	
지원자격	저소득층 (서울다솜학교 포함)	저소득층 (하나고)	저소득층	저소득층 (사회공익, 선행활동)	저소득층
지원인원	13,000명	90명	3,700명	50명	100명
지원규모	학비 전액	연 1,600천원	1,000천원(1회)	3,000천원(2회)	최대 3,000천원
지원규모	6,100백만원 (만간탁10억원 포함)	144백만원	3,700백만원	300백만원	310백만원

※ '14년 기본재산 적립현황 : 131억원

○ 민간기탁 장학사업 확대

- '14년 12개 분야 1.013백만원 ⇒ '15년 13개 분야 1.362백만원
 - · 씨티코스비 여성기업 아카데미, 인원커뮤니케이션즈, 현대자동차 그룹 등
- 기업·개인 고액 기부자 지속적 우호 관리를 통해 민간기탁 활성화

- 장학생 선정위원회 신규 설치·운영을 통해 투명성·공정성 제고 : '15. 2월
 - 학교장 2명, 교수 7명, 변호사 1명 등 총 9명, 3회 운영
- 시 출연장학사업 : 저소득층 고교 장학금 등 4개 7.693명, 4.339백만원 지원(15, 6월)
- 민간기탁·자체사업: 소나무 장학금 등 7개 200명, 353백만원 지원(15, 6월)
- O 하나고 장학금 축소 지원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15, 3.19)
 - '14년 이후 삭감된 장학금 648백만원 및 지연배상금 20% 지급청구
 - 1차 변론('15, 6,24), 2차 변론('15, 7, 22) : 법령개정으로 장학금 축소조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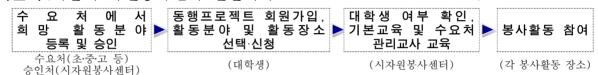
□ 향후계획

- **출연** 및 기탁 장학금 지원대상 선발·지원(8,616명) : '15. 8월 ~
- ② 대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 (동행 프로젝트) 추진

◆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봉사열정을 지닌 대학생들이 초·중·고 동생들에게 지식과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교육격차해소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활동기간** : **1학기**(3~6월, 여름방학), **2학기**(9~12월, 겨울방학)
- 참 여 자 :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교의 대학(원)생 12천명
 - 활동시간 : 1회당 2시간 이상, 학기별 40시간 이상
- 수혜대상 : 학교(초·중·고),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60천명
- O 참여절차(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 '13. 1.1~'15. 12.31)



○ 사 업 비 : 2,054백만원

□ 추진현황

- 동행프로젝트 참여실적('15년 1학기)
 - 지역아동센터 등 수요처 851개소, 수혜학생 31,702명, 참여대학생 5.641명
- 정기적인 교육 및 전문가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역량 제고
 - 봉사자 교육 : 30회 7.928명('15. 3월)
 - 수요처 운영현황 및 건의사항 모니터링 : 200개소('15, 4~5월)
- 동행프로젝트 운영개선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 재능나눔 활성화
 - 지역아동센터 대학생 배치인원 증원 : 149개 센터, 3→ 5명('15. 3월)
 - 기획봉사 추진 : 17개팀(경로당 효도봉사 8개팀 포함. '15.5.13~)
- 재능기부자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우수봉사 대학생. 관리교사 해외봉사활동 기회 제공 : 60명('15, 7월)
 - 시장표창 확대(35→ 50명 3.7 발대식 수여), 기업탐방 4회 43명, 무료공연 4회 56명

③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지원

◆ 기초생활보호대상·한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급식제공, 생활·자립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 O 대 상 : 최저생계비 150% 미만(기초생활보호대상, 한부모, 다문화 등)
- 사업내용
 - 방과후 학습지도. 문화체육활동 제공 등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취약계층 청소년 상담, 학업복귀 지원, 자립프로그램 제공
 - 학력 인정·미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청소년 야가공부방 운영 지원
- O 사 업 비 : 7,113백만원(국비 1,862, 시비 5,251)
- -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621백만원 910명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45개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수련관 등 21개소)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확대 운영 : 8→24개소(증 16)
 - 학업복귀 및 학력 취득 프로그램 등 참여 : 823명 발굴 933백만원 지원
 - 경제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생활·건강·학업 지원: 872명 71백만원
 - 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청소년 지원(10~350만원)
 - 학력 인정·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26개소 290백만원
 - 운영비 및 문예행사비, 야식비 등
 -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지원 : 94개소 392백만원
 - 좌석수 등 고려, 구립 청소년공부방 인건비 및 공공요금 차등 지원

④ 서울영어마을 운영

◆ 영어권 문화체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학습동기 유발 및 자신감을 배양하고,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에게 무료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 구현

□ 현 황

구 분	부지면적	건물면적	개관일	조성비	수용인원	수탁기관	현 위탁기간
풍납캠프	16,733 m²	13,260 m²	04.12.7	121억	450명	㈜헤럴드, ㈜헤럴드에듀	12.12.7~15.12.6
수유캠프	64,982 m²	12,431 m²	′06.3.27	367억	450명	(주)YBM에듀케이션	15.4.27~18.4.26
관악캠프	20,391 m²	7,040 m²	10.3.30	298억	300명	㈜헤럴드, ㈜헤럴드에듀	'13.3.30~'16.3.29

□ 추진현황

○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참여 지원

-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에 대해 참가비 전액 지원
 - ▶ 정규프로그램, 방학캠프, 중장기 프로그램 : 50~800천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경우 50% 지원
- 사 업 비 : 1,779백만원(정규 759, 방학캠프 720, 중장기 300)
- 지원실적('15, 6월말) : 6,378명 참여, 1,141백만원 지원

○ 단체입소 지원

- 서울소재 초등학교 3~6학년생에 대해 참가비 및 차량 운행비 지원
 - ▶ 단체입소 참가비 지원 2일/2박3일 : 20천원, 5일/4박5일 : 30천원
 - ▶ 차량운행비 지원 25인승 : 110천원, 45인승 : 231천원
- 사 업 비 : 1.319백만원(참가비 730. 차량운행비 589)
- 지원실적('15, 6월말): 17,138명 참여, 564백만원 지원(차량운행 1,094회)
- 취약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 구입: 476백만원('15, 6월, 집행률 77.8%)
 - 옥상 및 건물외벽 보수, 체험실 장비교체, 숙소비품 등 교체
- 영어마을 기능전환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서울연구원): '15. 7월

① 시민력을 제고하는 시민대학 확대 운영

◆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청, 대학연계 시민대학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1 ~ 12월

○ 교육장소 : 제1시민청(시민청), 제2시민청(강남SBA컨벤션센터), 은평학습장, 대학연계 시민

대학(학교별 강의장)

○ 강좌내용 : 인문학적 성찰, 예술적 감수성, 생활인문 등 198개 강좌

○ 사 업 비 : 760백만원

□ 추진현황

- 제1·2시민청 시민대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39개 강좌 2.102명(15.6월)
 - 제1시민청 : 주2회(화·목, 10·14·19시), 태평홀, 워크숍룸
 - ▶ 인문학적 성찰, 시민 민주주의, 삶의 터전, 예술적 감수성 등 4개 분야
 - 제2시민청 : 주2일(수·금, 13·16시) 강남SBA컨벤션센터 컨벤션홀1.2
 - ▶ 명사인문, 세계인문(여행, 다문화), 생활인문(인생설계, 생활법률, 환경) 등 3개 분야
- 대학별 특화된 강좌 중심의「대학연계 시민대학」확대
 - 경희대 등 9개 대학 운영 : 27개 강좌 1,236명('15. 6월)
 - 한국외대, 숭실대 등 5개 대학 확대 협약서(MOU) 체결: '15. 7.20
- 은평학습장 시민대학 운영
 - 평생교육사·예술지도사 역량강화과정 등 4개 과정운영 : 15개 강좌 711명('15. 6월)
 - ▶ '17년 학점은행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중

②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 대한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지식소유 격차 해소를 통해 교육복지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5. 1 ~ 12월

○ 지원대상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 지원내용 : 강사료, 사무용품비, 교과서구입비, 기타운영비 등

○ **지원규모** : 64개 기관 127학급(성인대상)

- 초등과정 108학급 1.964명, 중학과정 19학급 419명

○ 추진방법

- 서울시 : 사업비 지원(50%) 및 사업 성과 관리

- 교육청 : 공모사업 주관, 사업 성과 관리(현장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 사 업 비 : 782백만원

- 서울시와 교육청이 프로그램 지원비 5:5 공동부담 추진 ※ 2015년 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예산: 800.575천원

- 시교육청 공모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 선정('15.2.9.)
 - 교육청 문해교육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
- 문해학습자의 안정적 학습환경 구축 예산지원 : 372백만원('15, 7월)
 - 교육청 주관 문해교원 및 담당자 예산집행 요령 등 연수('15, 5월)
- 현장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성과 관리방법 협의 : '15. 7월
 - 서울시·교육청 공동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③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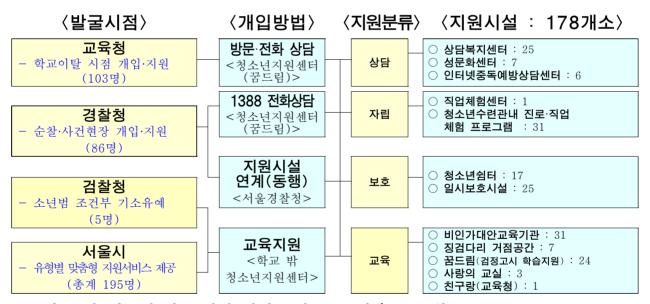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상담·교육·취업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 추진배경

- 정규 교육과정을 중단하고 학교를 이탈하는 청소년 지속 증가
 - 학교 밖 청소년 20% 증가 : 13천명('10년) → 16천명('13년)
-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기 지원 곤란

□ 추진현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체계 구축·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업 추진 : '15.5.29)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실적 : 총 195명('15. 6월)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확대 지원**(교사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 **1.860백만원**('15.6월)
 - 지원기관 확대(38→42개소), 교사의 최소인력 보장(기관별 2명), 급식비 인상 지원(초등 3,110 ⇒ 3,150원, 중·고등 4,100 ⇒ 4,170원)

2. 문서검증

1) 행정국

-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교부내역
-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인센티브사업비 교부내역

2) 기획조정실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현황 : 도로시설(신설/복구), 공원녹지 사업예산
- 자치영향평가제도 평가대상으로 시 정책사업외에 국고보조사업 포함 여부 검토
- 조정교부금(일반, 특별조정교부금) 현황(최근 5년간)
- 2015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업 세부내역

3) 도시재생본부

- 자치구별 체비지 현황 및 대부료 부과 현황(최근3년간) 및 부과 근거
- 낙후지역 발전시킬 대상 사업 발굴
- 남산 곤돌라 사업 중앙투자심사 자료
- 방화동 5호선 종점~차량기지촌~육갑문 일대 건축폐기물 재활용 부지 공원화 사업 용역 결과 보고서

4) 도시계획국

- 광운대역세권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자치구별 상업지역(세분) : 위치, 면적
- 도시계획시설 현황 최근 자료
- 영동대로 하부 복합환승센터 구축 용역,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 용역, 잠실종 합운동장 주 보조경기장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용역, 올림픽대로 및 탄천 동서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 용역 등 발주 및 중간보고서
- 동북4구 사업 중 강북구 사업 자료

5) 도시교통본부

- 사당역 환승주차장 향후계획
- GTX 노선관련 업무보고
- 영동대교 지하 5개의 철도노선 노선

6) 평생교육정책관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 조례상 전출금(교육경비지원) 관련 2014, 2015년도 전출내역(사

업 포함)

- 고등학생 무상급식 소요예산무 및 무상급식 확대시 추가예산 추계 자료
- 민간기탁 교육관련 자료(장학사업)
- 대학생 재능나눔, 대학생 선발기준, 참여인원, 지출 자료 등
- 서울동행프로젝트 재능기부자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관련 : 동행프로젝트 해외봉사 활동 선정기준과 명단
- 서울장학재단 민간기탁 장학사업 현황

Ⅳ. 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요지

1. 제1차 회의 (2015년 7월 9일)

○ 위원장에 김기대 의원(성동3·더불어민주당)을, 부위원장에 오봉수 의원(금천1·더불어 민주당)과 황준확 의원(강서3·새누리당)을 각각 선출함.



<제1차위원회 (2015년 7월 9일) >

2. 제2차 회의 (2015년 7월 30일)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장, 도시재생본부장, 평생교육정책관으로부터 업무보 고를 받고, 자치구별 개발의제 및 현안 과제 발굴, 자치구의 의존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 개월 연장하기로 함.

① 업무보고 주요 내용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은 서울의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하는 도시개발특별회 계의 최근 5년 투자현황과 2015~2019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 개발특별회계 운용전망 및 계획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함.
- 행정국은 최근 5년간 자치구의 재정실태와 재정력 격차,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지방자치 출범 20주년을 맞이하여 시·자치구간 지속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재정분담 현실화 등 혁신적인 자치분권 방안에 대해 보고함.
- 도시재생본부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색역세권 개발,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함.
- 평생교육정책관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누구나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강화 등을 보고함.

② 주요 논의내용

-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별 낙후지역 개발 및 현안과제 발굴 검토를 제안 함.
- 자치구의 숙원 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투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함.
- 지역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각종 규제로 사업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각종 규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함.
- 주거지역을 종세분화한지 10년이 넘었으므로, 그 간의 지역여건 변화, 개발수요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함.
- 서울시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와의 사전협의나 협력 등을 통한 조례 개정이나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를 언론에 발표하는 등의 행위는 의회의 기능을 경시하는 행위이므로 지양되어야 함을 지적함.
- 협력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을 당부함.

- 방화동 5호선 종점~차량기지촌~육갑문 일대 지역은 전체 공원화 보다는 역세 권 개발 등을 통한 물류 등 유통시설을 입지시킬 경우 투자 대비 효과가 배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당부함.
- 자치영향평가제도 평가대상으로 시 정책사업외에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당부함.
- 학교 밖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청, 경찰청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함.
- 시세와 구세의 세목 교환 등 다각적 측면에서 자치구의 의존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당부함.

3. 제3차 회의 (2015년 9월 16일)

① 업무보고 주요 내용

-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으로부터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교 류복합지구로 개발하여 국제업무,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의 미래 핵심 공간 및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진행 현황 및 과제에 대 해 보고를 받음. 구체적 내용으로는.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현황으로 유치할 핵심기능, 주요 부지별 개발 가이드라인 과 향후계획을.
-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 국 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옛 한전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에 있어 제안서의 주요내용, 협상조직의 구성과 운영, 잠실운동장 일대 공공개발 추 진 기틀 마련을 위한 방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에 대해 보 고 받음.

② 주요 논의내용

○ 성공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 중 전체 잠실운동장 면적의 33%에 해당하는 국유지와 면허시험장 등 타지역 시유지간 자산교화 방안과 관련한 중앙

정부와의 협상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함.

- 잠실 학생체육관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원칙적 동의하나, 입지와 시설규모 등을 현재 수준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대해, 학생들의 이용시설임을 감 안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를 물색할 것을 당부하고 서울 시의 학생 체육관 매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잠실 부지내 학생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경우에는 2019년 전국체전(100 주년)이 끝난 후 할 것을 당부함.
- 영동대로 하부 복합환승센터 구축은 교통유발, 인구유입,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함.
-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시 지역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타 지역의 개발과제 및 현안을 발굴하여 이에 상응하는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조직에 강남구청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함.
- 강남구청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시 6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울시의 경제적 도심은 물론 MICE 산업의 세계적 명소가 될 것임을 고려하여, 개발의 시각을 자치구 차원에서 벗어나 서울의 상생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보는 균형 감각이 필요함을 지적함.

4. 제4차 회의 (2015년 12월 7일)

① 업무보고 주요 내용

-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으로부터 공공기여금 관련 입법동향 및 쟁점사항, 창 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먼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제공방법 및 제공범위 확대 관련 국 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건의안 및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추진현황 등 국회 동향을.
- 둘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현황으로, 동북4구 발전전략(행복4구 플

랜) 추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가칭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과제로 동북4구 발전을 위해 관련 민·관 조직·단체간 광역적 거버넌스 구성·협업 등에 대해 보고받음.

② 주요 논의내용

- 강북4구(성북, 강북, 도봉, 노원)가 균형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등) 변경 가능성 여부 및 표류상태에 있는 사업(강북구) 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을 역설함.
- 구 한전부지 관련 협상과 관련하여 해당 구청과의 감정적 대립은 지양하고, 협상 안 협의나 협상기구 참여 등에 해당 구청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을 계속 하는 등의 노력 및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함.
- 동북4구 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업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고 있으므로, 중간 소통 창구로 개발계획안 수립 및 협의 과정 등에 해당 지 역 시의원의 참여를 제안함.
- 성북구와 강북구에는 대단위 개발가능 부지가 없으므로 역세권 등의 개발로 동북 4구의 개발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동력 확보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함.
- 대단위 토지 개발시 확보되는 공공기여금의 사용 대상지역을 동일생활권 범위(특별시·광역시)로 확대하려는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은 다른 지자체로의 확대 요구 등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시설 이전이 필요한 기관과의 협의 등 철저한 진행으로 동북4구 발전전략이 그 수립 내용대로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할 것을 당부함.

5. 제5차 회의 (2016년 6월 10일)

① 업무보고 주요 내용

- 마곡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마곡 첨단 R&D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를 받은 주요 내용으로는,
- 각 사업지구별 진행현황과 산업시설용지 토지분양 및 착공현황, 공공산업지원시

설 건립추진현황, 국내외 우수기업 전략적 중점 유치 마케팅 추진현황, 기반시설 구축 및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 받고,

-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과 동북4구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각각 동 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구체적 내용으로는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 현대차 부지 개발지원, 잠실운동장 일대 사업 화 방안 등과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단계별 추진계획, 플랫폼 창동 61 조성·운영, 기타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음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지역발전본부 신설 및 조직개편에 대해 보고받은 구체적 내용은
- 조직개편의 추진배경과 조직개편 내용, 지역발전본부의 업무 등에 대해 보고받음.

② 주요 논의내용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참여단에 서울시민단체의 참 여 등 구성을 다양화하여 시민과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계획을 만들어가는 체계 마련을 당부함.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과 같이 특정지역에 인프라를 집중시킴으로써 오 히려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은 지양되어야 함을 강조함.
- 7월 1일 신설되는 지역발전본부는 기존의 4개 권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 개의 과(課로)로 편성된 조직으로서, 서울의 균형발전 실현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역발전본부의 조직과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재점검 및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함.
-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함.
-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등의 분야 뿐만 아니라 재정, 교육,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는 사업을 통한 균형발전 추진이 중요한 바, 모든 분야의 시책

사업을 조율하는 컨트롤 부서(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함.

6. 제6차 회의 (2016년 11월 9일)

① 업무보고 주요 내용

-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관으로부 신도시계획에 따른 현금 기부채납금 사용범위, 법령 개정 추진 현황, 신도시계획에 따른 대규모 부지별 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대해 보고를 받은 주요 내용으로는,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제공방법 및 제공범위 확대 관련 국토계 획법 시행령 개정건의안 및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추진현황,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제도의 협상 대상지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고,
- 지역발전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구체적 내용으로는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추진,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 MICE 및 여가·생태가 어우러 진 복합단지 조성, 현대차부지 건립 추진 지원, 거버넌스형 사업 추진체계 등을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과 관련하여 단계별 추진계획과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마곡 첨단 R&D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별 주요 추진현황과 내용을, 수색역 일대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각각보고 받고,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대해 보고받은 구체적 내용은
- 균형발전을 반영한 도시계획 수립, 낙후지역 도시재생 추진, 사회복지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 해소,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등 그간 추진하였던 지역 균형발전정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받음.

② 주요 논의내용

○ 금년 7월 1일 4대 권역별 균형개발을 위해 지역발전본부를 한시적 조직으로 발 족시킨 바 있지만, 물리적 개발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분야별 균형발전 과 자치구별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 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또는 기획조정실에서 부서별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각종 균형발전 정책과 이슈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함.

- 서울시는 사회·경제·문화·도시계획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지역발전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 통할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서울시 정책수립시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 자치구별 역점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사업추진상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 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다른 시·도와의 협력을 선 도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함.
- 예산편성시 지역균형성 확보 등을 위한 균형인지적 예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함.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공기여금의 사용대상지역 및 사용처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함.

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1. 조례안

-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016.12.1. 김기대 의원 외 19인 공동발의(2016.12.1. 회부))
-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
 - 당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는 뉴타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제정·시행('03.3.15.)되었으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시행('06.7.1.) 및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지구로의 의제 ('15.6.11) 처리로 그 효용성을 다하였다 하겠으나, 여전히 지역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생활권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사항을 정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전부개정조례안의 구성
 - 당초 총 5개의 장과 26개의 조로 구성된 조례안을 총 11개의 조로 변경·구성하고, 제명을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하였음.
- 정책수립 및 시행의 기본원칙과 시장 등의 책무
 - 시 재정운영 및 재정투자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지역균형발 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함.
- 생활권계획의 수립
- 생활권의 특성있는 발전과 전략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 도록 하여 현재 서울시가 수립하고 있는 생활권계획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전담조직의 설치 등
-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전담 또는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서별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각종 균형발전 정책과 이슈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건의안

□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 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1519)

(2016.11.11.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의)

○ 제안경위

- 황준환 위원이 1인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발의한 동의안을 제270회 임시회 폐회 중 제6차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2016.11.9)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함.

○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는 2012년 4월 대규모 유휴부지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될 공공기여를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속한 관할 시·군·구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
- 그러나,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및 종합의료시설 등은 관할 시·군·구 경계를 넘어 상호 연계되어 있고, 지역균형발전은 기초 자치단체 범위가 아닌 광역 자치단체 범위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광역 자치단체 내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기여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에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2012년 4월 개정된 국토계획법령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제공범위를 현재 관할 시·군·구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광역 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함.

○ 이송처

- 국토교통부, 국회

□ 건의안 심사(도시계획관리위원회·본회의)결과

○ 원안 채택

Ⅵ. 종합의견

○ 지역균형발전은 서울시도시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정이 공간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향되어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 사회·경제·문화, 도시계획및 도시재생 관련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자치구별 격차실태 조사, 과제 발굴, 예산

- 의 지역적 안배를 통한 자치구별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의 통합과 삶의 질 향상,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이 같은 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발전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타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등이 심화되었다는 인식하에 이를 해소하고 나아가 각 분야의 균형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5년 6월 22일부터 18 개월 동안 활동해 왔음. 그 간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실행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을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됨으로써,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시 공공기여 사용범위를 현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구역 해당 자치구에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과를 올렸다 하겠음.
- 이 외에 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시행을 통합·관리하는 별도의 전담 조직 신설, 서울형 균형발전 정책강화를 위한 지역별 격차 실태조사와 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자치영향평가제도 도입, 균형인지적 예산 제도 도입 제안에 대 해 집행부의 긍정적 검토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 동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임.

붙임 자료

- 【붙임 1】서울특별시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2】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
- 【붙임 3】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보도자료

【붙임 1】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6

발의년월일 : 2016년 12월 1일

발 의 자: 김기대, 오봉수, 황준환, 강성언,

김동율, 김영한, 김종욱, 맹진영, 박양숙, 서영진, 유 용, 이승로, 장우윤, 조규영, 최판술, 박중화, 우미경,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의원(20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초 서울시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뉴타운사업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시행('03.3.15.)되어 왔으나, 뉴타운 사업 등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06.7.1.)되고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위 특별법의 재정비촉진지구로 모두 의제('2015.6.11.) 전환됨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은 사실상 그 효용성이 사라졌다 할 수 있겠음.
- 그러나, 그 동안 시행된 지역균형발전 시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간 균형발전은 서울시정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므로, 현행 뉴타운사업 등과 관련한 조례 규정을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생활권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서울의 균형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 촉진, 생활권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4조).

- 나. 지역균형발전과 특성있는 생활권 발전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균 형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생활권의 특성있는 발전과 전략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균 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0조).
- 마.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전담 또는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생활권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 2. "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 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가 자치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권역을 말한다.
- 3. "기반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 재정 운영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시 재정 투자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시 도시계획 수립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고 생활권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생활권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간 격차실태 등 여건 분석
- 2.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3.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 가. 자치구 재정 배분
- 나. 근린재생 및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 다. 산업·경제 활성화
- 라. 노후 주거지 정비
- 마. 문화·복지·교육·환경 여건 개선
- 바. 기반시설 확충
- 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4. 추진방안 및 평가체계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 공청회와 제9조에 따른 지역균형발 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이 조례 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은 제7조의 생활권계획 또는 제5조제2항제3호 각목의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생활권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활권의 특성있는 발전과 전략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생활권계획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③ 생활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황 및 특징
- 2. 미래상 및 공간구조 구상
- 3. 발전 목표 및 전략
- 4. 자족기반 강화 방안
- 5. 주거지 재생 및 정비 방안
- 6.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방안
-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장은 생활권의 특성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권계획을 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계획을 제1항에 따른 생활 권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 3.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따른 분야별 종합계획
- 4.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 8.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생활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가 그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시의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 1. 시의회 의원
 - 2. 3급(승진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시 공무원
 - 3. 도시계획, 건축, 환경·조경·교통·교육·문화·역사·재경·복지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등
- ④ 제3항제1호의 시의회 의원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 라이 된다.
-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 다
- 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시장은 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전담 또는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하 거나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나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

의 안 번 호

1519

제출일자: 2016. 11. 11

제 안 자 : 지역균형발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1. 제안경위

○ 이 건의안은 황준환 위원이 1인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발의한 동의안을 제270회 임시회 패회 중 제6차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2016.11.9)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임.

2. 주문

- 2012년 4월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의 부영향 저감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계획이득의 사회적 배분, 즉 공공기여의 제공범위를 관할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적인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공공기여의 활용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가 절실한 기초 자치단체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 공기여 제공범위를 광역 자치단체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함.

3.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는 2012년 4월 대규모 유휴부지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될 공공기여를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속한 관할 시· 군·구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

- 그러나,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및 종합의료시설 등은 관할 시·군·구 경계를 넘어 상호 연계되어 있고, 지역균형발전은 기초 자치단체 범위가 아닌 광역 자치단체 범위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광역 자치단체 내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 기여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에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2012년 4월 개정된 국토계획법령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제공범위를 현재 관할 시·군·구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광역 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함.

4. 이 송 처

- 국토교통부
- 국회
- 5. **붙임**: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 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

나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

국토교통부는 2012년 4월 대규모 유휴부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시에는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계획이득의 사회적 배분(이하 '공공기여'라 함)을 위해,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속한 관할 시·군·구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공을 허용토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는 대규모 유휴부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부영향이 해당 사업부지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대규모 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 취약지역에서도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 또한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공공기여 제공범위를 관할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영향은 관할 시·군·구 경계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미치게 되는 바, 부영향 해소를 위한 공공기여의 사용범위도 이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져야 한다. 광역적으로 이용되 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및 종합의료시설 등은 관할 시·군·구 경계를 넘어 상호 연계되어 있 고 이용되고 있으므로 공공기여의 사용범위를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보다 확대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할 시·군·구와 상관없이 시설이 연계되어 있는 배수구역 내에서 제공가 능(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둘째,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현재 관할 시·군·구 범위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공공기여를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은 관할 시·군·구 범위에서만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니라 광역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타당하다. 따라서,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기여 사용범위를 현재 관할 시·군·구가 아닌 특별시·광역시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시에는 기부채납의 일부를 현금으로 대신할 수 있고(도시정비법 제4조),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편입·관리되

어 광역 자치단체 전역에서 사용 가능함

또한, 광역 자치단체 내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구는 공공기여를 활용한 기반시설 확보가 현실적인 대안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부재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반시설 확보 자체가 곤란하므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서울시 대규모 유휴부지 중 한 곳인 강남구 옛.한전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공공기여 활용범위에 대한 서울시민과 전문가 의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자치구(강남구) 외지역에서도 공공기여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바 있다.

〈공공기여 활용 범위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구 분	공공기여 사용범위	기타 의견	비고
전문가 의견	해당 자치구에 우선사용하되, 서울시 전체적 활용필요 : 79.5%	지역발전 형평성 고려한 분산투자 필요 : <u>32.4%</u>	
시민 의견	해당 자치구에 우선사용하되, 서울시 전체적 활용필요 : 83.8%	_	

따라서, 2012년 4월 개정된 국토계획법령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제공범위를 현재 관할 시·군·구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광역 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2016. 11.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

2016년 11월 10일(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의원명 : 김기대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동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4매

위	원	장	김 기 대	3705-1053~5		
수석전문위원			조 정 래	3705-1303		
전 -	문 위	원	오 정 균	3705-1347		
입 t 주	설 조 시 무	나 관 관	임 경 숙 강 천 수	3705-1305 3705-1299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워 특별위워회 활동결과 보고

- □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대, 더불어민주당 성동3)는 11월 9일 회의를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였다.
- □ 특별위원회를 이끈 김기대 위원장은 "당초 삼성동 현대자동차부지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사업을 포함한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을 계기로 강남북 불균형발전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권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시책 사업을 발굴 지원할 목적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운영 전반부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외에 동북권의 상계·창동 신경제중심지(CBD) 개발사업, 서남권의 마곡지구 개발사업, 서북권의 수색역세권 개발사업등 권역별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사업을 독려하였고, 운영 후반부는 명실 공히 제대로 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운영한 결과, 단기 성과목표와 중장기 성과목표로 구분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 □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선, '균형발전 정책'을 서울시 핵심 시정목표로 재확인하며 공간·시설 등 개발사업 외에도 사회 서비스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가기로 하였다.
 - 둘째, 뉴타운 사업을 축으로 입법되어 사실상 생명을 다한 현행 「서울특별시 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역균형발전 행정 기본원칙, 균형발전 격차 실태 조사, 기본계획 수립, 균형발전 전담조직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

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공동 발의하기로 하였다.

- 셋째,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득의 사회적 배분, 즉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한정된 것을 서울시 전지역('광역자치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 넷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균형발전정책을 총괄하는 조직 신설개편 방안, 예산편성시 균형발전인지영향 평가제도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 □ 지난 1년 6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온 김기대 위원장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 서도 25개 자치구의 균형있는 발전과 서울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위활동에 임해주신 오봉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과 황준환 부위원장(새누리당, 강서3)을 포함한 19명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특성화된 균형발전을 위해 전분야에 걸친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장기적 정책로드맵을 작성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며 균형발전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기 대 (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Tel: 02) 3705-1053~5, Fax: 02) 3705-1457

010-5343-0036

E-mail: kkd7792@hanmail.net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상임위 및 지역구	핸 드 폰	연구실전화 (FAX)	연구실	E-mail
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김기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동 3	010-5343-0036	3705-1053~5 (3705-1457)	603	kkd7792 @hanmail.net
부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오봉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금천 1	010-5221-6652	3705-1041~3 3705-1453	610	ohbongsoo @empas.com
부위원장 (새누리당)		황준환	교통위원회 강서 3	010-3705-2483	3783-1791~3 3783-1794	807	JH-2006 @hanmail.net
위 원 (더불어 민주당)		강성언	교육위원회 강북 4	010-5224-4175	3783-1521~3 3783-1524	703	kangse207 @hanmail.net
		김동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중랑 4	010-5411-8289	3783-1626~8 3783-1629	723	sk6186 @hanmail.net
		김영한	기획경제위원회 송파 5	010-6321-6823	3783-1711~3 3783-1714	732	younghank2 @hanmail.net
		김종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로 3	010-6231-3252	3702-1507~12 3702-1546	대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	gurokjw@ gmail.com
		맹진영	기획경제위원회 동대문 2	010-5009-7091	3783-1621~3 3783-1624	722	mjytop@ hanmail.net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성동 4	010-3257-2799	3705-1261 3705-1461	보건복지 위원장실	andante96@ hanmail.net
	1	서영진	교통위원회 노원 1	010 - 3745 - 8103	3705-1306~7 3705-1401	교통 위원장실	syj5000 @hanmail.net
		유 용	기획경제위원회 동작 4	010-5122-9200	3705-1112~3 3715-1467	608	uyongb1 @naver.com
		이 슝 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성북 4	010-5287-2994	3783-1941~3 (3783-1944)	520	leeslo9167 @naver.com
		장우윤	교통위원회 은평 3	010-3719-3726	3783-1731~3 3783-1734	516	sharuhen @hanmail.net
		조규영	행정자치위원회 구로 2	010-9222-5061	3702-1209~1 1 3702-1214	부의장실	young65627 @hanmail.net
위 원 (국민의당)	9	최 판술	교통위원회 중구 1	010 - 3715 - 9471	3705-1059~6 1 3705-1459	605	pschoi1206 @naver.com
위 원 (새누리당)		박중화	교통위원회 성동 1	010 - 9490 - 5122	3783-1841~3 3783-1844	816	pjhkorworld @daum.net
	1	우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비례대표	010-6250-6336	3783-1856~8 3783-1859	819	mkbest333 @gmail.com
		이복근	보건복지위원회 강북 1	010-9976-0028	3783-1821~3 3783-1824	813	bokgeun0404 @hanmail.net
		이상묵	환경수자원위원회 성동 2	010-7537-0127	3783-1911~3 3783-1914	811	smlee626 @gmail.com
	9	이석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남 3	010-3300-5408	3783-1866~8 3783-1869	821	sjabd @hanmail.net